

# “혁신도시 행정구역 통합 주민투표로”

### 이미숙 전주시의원, 시정질문에서 주장 “인구 7만 넘어선 효자동 분동 불가피”

전주시의회 이미숙 의원이 전주시 혁신도시 행정구역 통합을 주민투표로 결정하지 않고 제안해 귀추가 주목된다. 이미숙 의원(효자동·4동·사진)은 21일 전주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전주시가 행정구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통합과 혁신도시 행정구역 통합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전주시 덕진구와 완산구, 완주군 지역에 걸쳐 있는 혁신도시는 우선 전주시민이라도 단일 구로 통합해야 한다”며 “입주민의 편의와 효율적 행정구역 관리를 위해서도 정치논리에 막혀 중단된 혁신도시 통합 문제를 주민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지난 2014년 한국자치행정학회의 전주시 행정구역조정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가 나온지 2년이 넘도록 효율적 행정관리를 위한 행정구역 통합 논의는 제자리에서 머물고 있다”며 “서부 신시가지 중심으로 인구가 집중되고 있는데도 정작 전주시는 지역민들의 불편은 외면하고 행정구역 조정은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주시 동 행정구역의 설정은 행정편의상 설정된 행정동과 국가공부상의 등재된 법정동이 맞지 않아 혼란을 일으키고 행정동의 구역 사이에도 인구, 면적, 접근성 등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행정구역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6년 2월 현재



전주시 동별 인구 현황을 보면 완산동(5834), 중남동(5591), 중앙동(9613), 동서학동(7587), 금암1동(7532), 팔복동(9859) 등이 인구가 1만명도 못미치는 반면, 효자동 인구는 7만 3880명으로 서부권에 인구가 집중되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급격한 인구 증가로 7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거주하는 효자동의 경우, 주민 편의와 효율적 행정을 위해서도 분동이 불가피”하다며 전주시 행정구역 조정 추진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승수 전주시장은 “행정구역의 통합 조정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조례 개정을 통해 시행된다”며 “지역 정

치권과 주민들의 의견이 상충해 행정구역 조정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답했다.

또 “혁신도시 행정구역 통합 구간 경제조정에 대한 의견 조율이 안될 경우 주민투표법 제7조 및 전주시 주민투표조례 제4조에 따라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혁신도시가 별도의 행정동으로 분동이 이루어 진다면 주민의견, 지역구 의원 등 다양한 설문조사를 통해 구간 경계가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전주시 행정동 간 인구 규모의 불균형 해소와 행정조직의 효율성 등 행정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구역 조정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지역 정치권과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한 일”이라며 “외견 수렴과 이견 통합 과정 등을 거쳐 행정구역 조정 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전북대병원, 유방암 적정성평가 ‘최고’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강명재)이 전국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방암 적정성 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 기관에 선정됐다.

21일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전국종합병원급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 유방암 적정성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1등급을 획득했다. 이로써 전북대병원은 심평원이 유방암 적정성 평가를 처음 실시한 2013년부터 3회 연속 최고등급을 받아 전국에서 유방암 치료를 가장 잘 하는 병원으로 인정받았다.

이번 평가는 만 18세 이상 여성에게 유방암 수술을 시행한 전국 의료기관

185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기간을 기준으로 시행됐다. 평가결과 전북대병원은 전 분야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받아 상급종합병원 평균점수를 크게 상회하며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특히 수술부담과 기록충실도 부문 전 항목이 100점 만점을 받는 등 유방암의 진료와 수술치료까지 진료시스템 전반이 매우 우수하다는 것을 입증했다.

강명재 병원장은 “앞으로도 지역민이 믿고 찾을 수 있는 병원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전북교육청, 에너지절약 추진

### 2010년 대비 22% 절감 목표

전북도교육청이 에너지 수요관리를 통한 에너지 효율 향상 및 에너지절약을 추진한다.

21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2016년도 에너지절약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에너지 수요관리를 통해 각급 교육기관의 에너지 소비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2016년 추진목표로 에너지 사용량을 기준년도(2010년) 사용실적 대비 22% 절감을 목표로 한다.

에너지절약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으로 공통 부문에서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운영, 에너지 지킴이 지정·운영, 소속 및 산하기관의 에너지절약 추진사항 지도·감독을 추진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에너지 절약은 구호가 아니라 실천이 중요하다”며 “불요불급한 에너지사용 억제, 냉난방 기준온도 준수 및 에너지절약 점검 등을 통해 실질적인 에너지 사용량 절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가폭력 책임자 처벌하라. 전북지역 농민들이 21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백남기 농민과 관련, 엄정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 찜질방서 금품 훔친 30대 구속

완산경찰서는 21일 찜질방을 돌며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조모(33)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달 23일 전주시 한 찜질방 탈의실에서 옷장을 열어 현금 46만원이 들어있는 입모(52)씨의 지갑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조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전주와 김제, 전남 여수 지역 찜질방 10개소를 돌며 총 66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밝혀졌다.

# 전처 폭행 30대 집행유예

전주지법 형사2단독(강두래 부장판사)은 21일 이혼한 전처를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3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2013년 12월 24일 밤 11시께 전주시 한 아파트에서 전처 A(37·여)씨를 목격으로 때려 전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지난해 4월 3일 전주시내 길가에서 주먹으로 A씨의 얼굴과 다리 등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이혼한 전처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 새만금환경청, 비산먼지 건설사업장 점검

새만금지방환경청(청장 조병욱)은 봄철 미세먼지와 황사로 인해 국민 건강이 우려됨에 따라 비산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대규모 건설사업장 및 대형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은 계도기간을 거쳐 5월말까지 2개월

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다. 주요점검 대상은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현장과 비산먼지를 다량 발생시키는 석산 골재 채취장 등이며,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여부, 세류·세차 시설 및 방진덮개 등의 비산먼지 발생 억제 시설 적정 설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새만금환경청은 지난해 봄철 비산먼지 특별점검에서는 25곳을 점검, 11개 사업장을 적발(위반율 44%)해 고발 및 개선명령 등의 처분을 내렸다.

새만금환경청 환경감시팀장은 “황사와 미세먼지가 겹칠 경우 국민 건강이 더욱 우려되는 만큼 사업장 스스로가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기준 등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에너지자립 전주 만든다

### 시, 시민 참여 '에너지 30% · 전력 40% 자립' 계획 추진

전주시가 시민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오는 2025년까지 에너지자립 3040 플랜을 추진한다.

특히 시는 공동주택과 학교, 마을단위로 소형 태양발전시설을 설치해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늘리고 에너지 절약 및 효율상승 정책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현재 각각 13%와 5.8%에 머물고 있는 지역 에너지자립율과 전력자립율을 각각 30%와 40%까지 끌어올리는 에너지자립 3040 플랜을 통해 에너지자립 문화도시 전주를 만들기로 했다.

전주시는 21일 김승수 시장과 에너지 자립도시 다음세대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 안전(자립)도시 계획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용역 연구수행기관인 사(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와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전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 동안 시민 시나리오 워크숍과 전문가 및 시민단체로 구성된 에너지 자립도시 다

올미당 위원들과의 숙의적인 토론회를 거쳐 마련한 용역결과를 토대로 ‘전주시 2025 지역에너지계획’이 수립됐다.

이번 연구용역에서 시나리오 워크숍에 참여한 시민들은 전주시 에너지정책의 미래 비전을 에너지자립 문화도시 전주(내가 만든 에너지, 따뜻한 전주)로 정하고, 2025년 정량목표로 에너지자립 3040(에너지자립 30%, 전력자립 40%)을 제시했다.

또한 용역기관들은 시민들이 제시한 의견을 토대로 △절약과 효율 △분산과 생산 △참여와 나눔 △교육과 문화 △상생과 통합의 5대 전략과 10대 방향, 30개 주요사업, 단계별 추진전략 등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오는 2025년까지 태양광과 지열 등 전주시 신재생에너지생산량은 35만6353TOE(석유환산톤)까지 끌어올리고, 에너지절약(9만5546TOE)과 효율상승(8만1346TOE) 등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도 90만3765tCO2 줄인다는 구상이다.

고창군 공고 제2016-353호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

고창군 노동권 하천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을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주민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 · 공고합니다.

1. 계획의 개요
  - 계획명: 노동권하천 기본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 위치: 전북도·고창군·고창읍 일원
  - 연장: 3.9km
  - 사업시행: 고창군
  - 승인기관: 전착도
2.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3월 22일부터 4월 14일까지(20일간, 공휴일 제외)
  - 공람장소: 고창군 재난안전과, 고창읍사무소
  - ※정보통신망: 고창군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go.kr)
3. 주민설명회 개최일시 및 장소
  - 개최일시: 3월 30일(수) 오후 2시
  - 장소: 호동미유회관(고창읍 화산·호동? 9)
4. 주민의견 제출
  - 제출내용: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관한 의견
  - 제출방법: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 양식에 의거 공람장소에 서면제출
  - 제출기간: 공람기간내로 인코부터 7일 이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 공람장소 또는 고창군 내선연락처(063-560-2666)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 3. 22. 고창군수

#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